



사진 출처: 단국대병원

자본주의는 코로나21, 코로나22도 만들어 낼 것

관련 기사 4~5, 6~8, 9면

진화생물학자 롭 윌리스 강연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6~8면

코로나19 위기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4면

코로나 블루와 자살은
자본주의 탓

9면

팬데믹 하의
국제 정치

10~11면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는
문재인 정부

3면

사참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상

2, 12면

과대포장된
특고 산재·고용보험

온라인 기사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부당한 참사 문제 해결에 미온적임을 다시 보여 주다

김승주

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정무위)가 세 개의 안을 통합했는데 핵심은 지난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하 박주민 원안)이었다.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관(수사권) 보장, 인력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4.16가족협의회는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활동 기간 연장만 1년 6개월로 축소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후퇴한 법안마저도 '지금까지 피부는 국세가 얼마나며 역겨운 논리로 반대했다. 참사의 책임자들 아니랄까 봐 말이다.

그러나 결정적 후퇴는 민주당이 인수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처음에는 '수사권을 빼면 안 된다' 하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압박에 밀려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후퇴한 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긴 듯하다.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이 세월호 책임자 처벌의 공소시효 연장과 연동돼 있음을 특히 의식했을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사기관"으로 바꿨는데, 사실상 공수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둬들인 규제 완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개악인 부분도 있다. 개정안은 진상 규명 대상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를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업무를 한정했다. 대신 해당 인력을 세월호 조사에 투입하겠다고 한다.(5조 2항). 이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교악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담당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이 개정안에 항의하면서 사퇴했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도 즉시 규탄했다. "사참위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



“내 아이를 살려 내라” 2016년 12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연단에 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

상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 것이냐. ...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 흘려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 중단이 “이번 법 개정의 큰 오점”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번 개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참사 해결을 외치면서도 정작 실천은 거기에 한참 못 미쳤다. 이런 태도가 운동 안에서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 보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 왔는데,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완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지난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19 대책의 일환이라며 화학물질 취급 시설 정기검사를 9개월이나 유예해 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낳은 사상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다. 그런데도 최초 사망자가 신고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참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피해 규모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 피해자는 49~56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무려 1만 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정부 발표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처벌받은 책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중이다. 옥시 대표 존 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기도 했다.

살인 화학물질 PHMG·PGH를 유해성 시험에서 허가해 준 김영삼·노무현 정부,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사람들의 목숨보다 기업 보호를 우선한 역대 모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하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신청자는 6800여 명(8월 기준)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이런 저런 기준에 걸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에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 병원 기록이랑 모든 것을 냈지만 환경부에서는 ‘피해인 것은 비슷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너희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유가족 이명순 씨)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

임을 져야 할 주체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더 조사할 필요 없음’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근거로 사참위 수사권 부여를 반대했다.(정무위 심사 보고서)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외면하고서, 비열하게도 그것을 눈가림하고자 두 참사 피해자들 사이를 갈라치기 한 것이다.

왜 사참위는 전진하지 못했나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약속을 어기고 미루면서 ‘사참위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불만을 무마하곤 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강제력이 없고 거둔 성과도 많지 않다. 세월호 소위원회는 해경의 CCTV 조작 의혹,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선체 급선회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중 몇 가지는 허황된 음모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팬창은 탐사 보도를 이어 온 〈뉴스타파〉김성수 기자가 번번이 그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참위는 답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도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발표했지만 한계가 컸다.

게다가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의 진상 규명 책(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적폐 검사들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에 대한 인쇄 및 판매 금지가 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사참위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따라서 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참위의 수사권을 배제한 대신, 영장 청구권과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포함했다. 여전히 검사의 결정권이 큰 조항이다.

이미 현행법은 위원회에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 요청 권한도 있고 실제로 요청했다. 지금 검찰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운동 없이는 앞으로도 결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생겨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4년 참사 직후 세월호 수사를 호지부지 종결시킨 세월호 적폐 검사들을 오히려 중용했다. 이 검사들은 현 정부와 검찰 최고 요직에 앉아 있고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인의 측근이다.

당시 세월호 수사 총책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추미애 사단의 핵심인 이성윤이었다. 추미애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웅 검사(조국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를 역습하려고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몸을 날린 바 있다)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를 규탄했던 시민 흥 모씨를 구속한 전력이 있다. 한편, 구조 과정 수사팀장이었던 윤대진 검사는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다.

이성윤과 윤대진, 둘 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던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전임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정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그토록 미온적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제대로 된 참사 문제 해결을 성취할 수 없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_____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징계를 심의하던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공개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 …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 않는다.”

부패하고 억압적인 검찰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어법이다.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윤석열 찍어내는 권력형 부패 혐의를 수사한 것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정치 보복이고, 수사 중단(방해)을 위한 권력 농단일 뿐**이다. 적폐 청산(부패 척결)을 내세워 인기를 얻었던 정부이기에 그 위선은 더 큰 반감을 부르고 있다.

공수처는 애초에 개혁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욱더 아니다

공수처 신설이 정권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다. 이미 당시에도 검찰 권력 견제가 목적으로 제시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받았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문재인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층을 수사하는 것이니 정당한 것이라고 한 것은 신화였을 뿐이다.(12월 15일 본심을 드러냈다.)

신설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청와대 간부, 대법원과 고위 판사들,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 경찰·국정원·감사원 등의 고위 공무원 7000명 정도의 부패 혐의다. 이들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법 통과 시점에만 해도 공수처 찬성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특히 검찰을 두려워하고 공수처를 필요로 했을까? 첫째,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만 해도 지배계급의 제2 선호 정당이었다. 지배계급의 두 번째 선택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 통과 시점에만 해도 공수처 찬성 여론이 높았다.

둘째,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민주당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을 잡고부터 민주당도 구조적 부패의 일부가 됐다(“부패 신장

그것은 정부가 노동 존중, 집값 안정 등의 약속을 배신한 것의 연장선이어서 그에 대한 환멸이 급속히 커져 왔다. 사람들이 정권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이 실은 사기극이라는 것도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수처에 대한 지지도 줄었다.

더구나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전광석화처럼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만, 온갖 구설수만 양산하며 3주나 시간이 걸렸다. 그 3주 동안 검찰 거의 전체가 정권 중핵에서 이반했고, 판사들도 정부 지지를 회피했으며, 문재인이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다. 총선 압승 후 70퍼센트가 훌쩍 넘었던 지지율이 겨우 8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하자과 음모적 행각 등이 끊임없이 드러났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도 실은 여권 정치인들과 MBC·KBS의 일부 언론인들, 친정부 고위 검사들, 금융사기범이 함께 연루된 권언 유착이라는 정황이 더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새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찍어내기 공작을 검찰 외부에서 함께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심화되고 국가기구들의 이완과 지지 사회세력들의 이반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잘 알기에 정부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더 매달렸다.

개입 정당”),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는 유착하기 때문에, 집권 가능 정당이 된다는 것은 그 가능성만큼 부패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정도로 권력이 더 강한테도 **문재인 청와대가 공수처를 굳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덮기 위해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검찰과 충돌한 일의 압도다수는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 혐의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웃로비’, 김대중 아들들의 정치자금 수수, 노무현의 대선 정치자금 수수, 문재인 측근들이 연루된 선거 개입(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선거 개입 혐의에 연루됐다. 김경수의 대선 시기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검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것들 대부분을 현 공수처법에 담아 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통제 같은 견제조차 없다. 경찰·검찰의 고위 권력층 수사를 언제든 넘겨받을 수 있다(강제 이첩).

그렇다고 해서 이 기구가 훨씬 더 방대한 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결국 검찰 기구



권위주의 늘리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은 공수처로 국가기구 단속, 경찰 강화, 코로나 핑계로 시민적 자유 억제하기 등이다

특히,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 등 재보선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여권 부패 혐의 수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로 막지 못하고 문재인이 직접 나서야 했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레임덕 위기가 본격화되면, 우파 야당이 여전히 인기 없고 무한테도 여당이 얼마 전까지처럼 “야당 복” 누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는 공수처를 지지하지 말라

노동계 진보정당들과 좌파 일부가 여전히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12월 9일 당 지도부 내부의 상당한 논쟁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장 선출시 야당의 비토권 삭제)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논란도 만만치 않고 그만큼의 당내 반발도 있다. 장혜영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진 것에서도 드러난다.

진보당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변혁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촛불의 성과라는 오해를 드러냈다.

공수처가 실제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몸부림이므로,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를 사실상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본가 계급 기반에 충실해 왔다. 노동 존중 슬로건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전략은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기구나 국가기구에 참여시켜서 노동계급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 노동계급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개혁이 아니었다. 여성 차별이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낙태죄 유지 정책을 보라.)

개혁 약속 위반, 쥐꼬리만 한 개선도 되돌리기, 더한층 개악 추진 등 여러 양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 이런 배신을 개혁의 언어로 아주 우선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공수처법 등은 180석 의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노동개악법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통과시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노조할 권리 같은 개혁 입법을 미룰 때는 국민의힘 뜻을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결국 문재인과 민주당의 위선이 내는 주된 효과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으

로 생전 처음 정치 활동에 나섰다 보통의 청년들에게 ‘이용만 당했다’, ‘역시 세상은 안 바뀐다’, ‘진보나 좌파도 똑같이 내로남불’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우파는 바로 이 점을 공략하고 있다.

우파에 반대하며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속았다며 분노하는 청년들을 대변해 진보진영으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한다면, 이는 노동운동 전체의 신뢰에도 해가 되는 것이다.

진보 정당 지도자들이 공수처를 지지해 줌으로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에 민주당의 도움을 얻겠다는 실용주의적 계산이 단견인 이유다. 물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우파를 편들어서는 안 되므로 **우파와 중도파(문재인과 민주당)를 모두 반대하는 좌파적 양비론**이 올바른 스탠스일 것이다.

유감이게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게도 동참을 호소했다. 의회 책략을 앞세운 실용주의 때문에 민주당의 정권 유지용 공수처법을 지지해야 한다거나, 국민의힘 같은 노골적 친기업 정당에게 기업 규제 법안 지지를 호소하는 우스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부분적 입법 아젠다로 선명성을 세운다고 해도(‘선명한 정책정당론’) 독자적 대중 투쟁 없이는 기업 규제 법안이 신설될 리 없고, 설사 된다 해도 알맹이가 빠진 채 그렇게 되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나 세월호 문제처럼 민주당이 한 것 없이 개혁적 이미지만 챙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이 가능할까? 그렇게 계급 분단선을 흐리면서 장차 아래로부터 투쟁 고양에 필요한 의식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노동운동 공식 지도부들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 결별해야 한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장호중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치료센터는 필요하지만 격리를 위한 시설일 뿐 치료 시설과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느라 집에서 대기해야 하는 인원이 600여 명을 넘어서었다. 4일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9도 이상 고열이 나고 심박수가 분당 120회(숨이 가빠 혈맥이는 수준)까지 높아진 고령의 환자들이 집에 방치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방문 점검을 하지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영양료를 두고 나오는 게 할 수 있는 전부다.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이 당장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치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해도 안심하기가 어렵다. 수도권의 한 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다인실 병동에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3시간 넘게 옮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사망 직후 장례식을 거치지 않고 화장하는 데, 장례지도사가 화장터까지 다녀오기 전에 추가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병실이 완전히 꽉 차서 시신을 임시로 옮겨둘 곳조차 없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그 사이에 병원 노동자들 중에 확진자가 나와 십여 명이 추가 격리됐다. 환자와 노동자 모두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사실상 집단 감염

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요양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단일집단(코호트)으로 요양시설 내에 격리했다. 그나마 의료인력이 일부라도 있는 시설의 경우 가까스로 유지되지만 기도원 등 비의료시설의 경우 노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단일집단 격리가 낄을 위험은 잘 알려져 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시설 내 노인들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 줄 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고 민간 병원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 병원이 환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그동안 아무 대비를 안 해 왔으므로 기존 환자를 이동시키고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준비에만 1주일 가까이 걸릴 예정이다.

이처럼 병상과 인력 부족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방역 지침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방역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면서 정작 일부 정부 인사들은 조기 출구에 와인 파티 등 희희낙락하고 있으니, 생계가 막막해진 영세 자영업자들과 실업자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문재인 자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3단계로의 격상도 “필요하면 과감히 결단해 달라” 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로의 격상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회피해 버렸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경고를 열 달 가까이 무시해 온 정부는 대중의 눈길이 싸늘해지자 13일 일요일에 부랴부랴 공공병원 신축·증축 계획을 내놔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고 최근 더 심해지는 것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알맹이는 없다시피 하다. 대부분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이고 그나마 2025년까지 서너 개 공공병원을 짓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



12월 15일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손난로를 켜 놓은 방역 노동자들이 이제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신축되는 공공병원은 없을 것이고, 증축하겠다는 공공병원들은 기존 시설이 낡아서 증축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유체이탈

국민의힘은 백신 공급 시기 등을 문제삼으며 정부를 공격한다. 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나몰라라 하는데다 공공병원 신축 예산 0원인 2021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산재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자들이 백신 안전성을 기업 이윤보다 우선해 고려할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아직 사람들의 뇌리에는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정보 은폐와 극도로 무능한 대처가 또렷이 남아 있다.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자가 검사’ 도입 등 설익은 제안을 남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인기를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럴수록 방역 담당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일도 늘

고 있을 게 뻔하다.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장비는 아직 없다.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검체 채취를 집에서 각자 하는 것은 재앙을 낳을 것이다. 결국 검체를 검사실로 보내야 할텐데 이 과정에서 오염 등으로 검사 실패율이 높아질 것이고 가뜰이나 혹사당하고 있는 검사실 노동자들을 좌절하게 만들 것이다. 신속항원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위음성률(감염자를 놓칠 가능성)도 높다는 단점이 있다. 자칫 방역에 구멍을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방역 노동자들은 2중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 노동강도가 늘어 나고 검사 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병원들 눈치를 살피느라 병실 확보를 미루고 있다. 국립대병원과 성남의료원 등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나은 공공병원들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경영(수익성) 평가 등 재정 절감을 압박할 명분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이를 뻔하이는 병원장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부의 지원 액수와 방식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진료를 의뢰해야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코로나 대응은 힘든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11월 초에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크게 높인 바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 최후의 수단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주들의 이윤 획득(즉, 노동자 착취)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완화는 잔뜩 높여 놓은 기준도 충족시킬 만큼 많은 확진자를 낳았을 뿐이다. 물론 정부는 2.5단계와 3단계 사이에 또 다른 단계를 만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3단계 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그 부담을 기업주들이 지지 않게 하려 애쓸 것이다. 1년을 참았지만 그 피해는 또다시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고작 3조 원 확보해 뒀을 뿐이다.

이런 고통 전가를 막고 제대로 된 방역과 의료,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해야 하는 이유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임재경 연세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연세대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와 올해 재계약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코비 퇴출’이 이뤄진 것이다.

코비는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그 소속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았다.

코비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최저시급 이하였다.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식대도

받아 본 적이 없고 공휴일 근무에도 연장 수당을 받지 못했다. 결국 낮은 임금 때문에 ‘투잡’을 뛰며 임금을 벌충해야 했다.

또,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다. 코비는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정화소 독을 시키기도 했다.

코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휴게실은 휴게실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열악하다. 휴게실에는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코비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 입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곳에는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온갖 화학 악품과 청소도구가 잔뜩 쌓여 있다.

이런 조건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하자, 코비 사측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간질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부당 징계를 하고, 해고까지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코비와 계약하고, 그간의 노조 탄압을 모른척 방관한 연세대 당국도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

코비 노동자들은 연세대 당국에게 악질 용역업체 코비를 퇴출시키라고 요구하며 싸웠다. 연세대 학생들도 노동자들을 지지했다. 필자를 비롯한 노동자연대 소속 연세대 회원들도 함께 했다.

이런 압력 탓에 지난해 연세대 당국은 코비 퇴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

만 학교 당국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말 코비와의 계약을 1년 연장했다.

코비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이에 항의했다.

결국 악질 용역업체 코비가 연세대에서 퇴출됐다. 물론 코비 퇴출이 그간 지속돼 온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휴게실, 낮은 임금 등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과 연대는 지속·강화돼야 한다.

바이든이 미국을 코로나19에서 구할까?

장호중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12월 8일 한 연설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백신을 1억 회 접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마스크 착용 권고, 교사 수 충원 등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도 강조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을 코로나19 재난에서 구할 수 있을까?

먼저 바이든이 뭘 하든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는 나아 보일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10월 9일 트럼프의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는 CNN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겠다” 하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은 신뢰할 만한 무료 검사를 늘리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개인보호구 생산도 늘리기로 했다. 바이든의 계획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올해 4월 미국 우정청이 제안한 것처럼 집집마다 마스크가 배달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

바이든은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백신 생산과 보급에 250억 달러(27조 원)를 쏟아부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병원들이 치료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러려면 정부가 이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민간병원들과 보험사들은 지금도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간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환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바이든의 계획에는 코로나19와 다른 질병에서 인종 간 격차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도 포함돼 있다. 지금 미국은 확진자 현황을 카운티



사진 출처 Joe Biden(트럼프)

코로나19 자문단을 소개하는 바이든과 해리스 무엇을 하든 트럼프보다 낫겠지만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

(한국의 도 규모) 단위로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우편번호(동 규모) 단위로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규모를 고려하면 바이든의 계획으로는 사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예컨대, 바이든은 역학조사관 1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의 피츠휴 물란 보건인력 형평성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학조사관들이 영웅적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의 대도시 하나만 해도 역학조사관 6000명이 필요하다. 미국 전체를 감당하려면 10만 명으로는 어렵도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700만 명이 넘고, 매일 20~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하루 사망자도 1500명을

웃돈다. 18개 주에서 병상이 부족해졌고, 넘쳐나는 환자를 수용하려고 환자들을 조기 퇴원시키고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의료진들은 인력 부족 때문에 격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 구출하기

육류공장의 집단 감염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밀집한 산업과 지역의 경우 역학조사에는 훨씬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휴대전화나 공식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주민 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냈다.

이런 계획조차 바이든이 시행에 옮기려면 공화당과 협상해야 한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초 한 차례 1200달러(130만 원가량)를 지급한 것 외에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지만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 정부가 자본가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생산직·농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계속 출근해야 하지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주지사도 이들을 위해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의 계획에도 이런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바이든에게도 코로나19 통제 계획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트럼프와 차이가 있다면 바이든은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본다든 점뿐이다.

오바마 정부 하의 감염병 유행

바이든은 전임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퇴치를 위해 노력한 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공공보건 정책은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 실패를 반복한 것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신종플루, 에볼라, 조류독감,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고, 아이티에서는 유엔군을 통해 콜레라가 퍼졌다. 항생제 내성과 약물 중독도 증가했다. 오바마 정부의 국립과학재단과 국립보건원은 농축산업과 산림파괴, 구조조정, 자본 순환 등이 감염병 유행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에서만 130만 명을 죽였고, 시리아와 리비아, 이라크에서 피부 레이시마니아증이 창궐하게 만들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며 파키스탄의 소아마비 예방 캠페인을 망쳐

버렸다.

오바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의 버려진 주택들에서 창궐하도록 만들었고, 식품 규제 완화는 식중독 대란을 불렀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CDC는 디즈니랜드가 감염병에서 안전하다고 승인해준 바 있는데 그로부터 2년 뒤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이 퍼졌다.

오바마 정부의 CDC는 인체 감염까지 일으킨 조류독감이 발견된 미국의 대농장이 어딘지 비밀에 부쳤다. 국립동물보건연구소네트워크 등 공적 기관들에서 균주와 병원 유전체 분석이 이뤄졌지만, 그 결과는 해당 산업계를 제외하고는 들여다볼 수 없도록 기밀 처리됐다.

이런 조치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린 40여 년간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망가지고 사유화돼 왔다.

중구난방 코로나 자문단

바이든이 임명한 코로나 자문단을 이끄는 3인의 대표를 봐도 그들이 일관된 정책을 펴기에는 완전히 뒤죽박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흑인 여성인 마르셀라 누네즈 스미스는 예일대학교 공공보건학 교수로 코로나19 유행의 인종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될 듯하다. ‘건강 불균형’이라는 용어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인종 간의 차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고안된 용어다.

그러나 흑인과 라틴계의 코로나사망률이 백인의 갑절 가까이 되는 것은 단순히 몇몇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뿌리박힌 인종차별 때문이다. 마르셀라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질병의 인종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른 대표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미네소타대학의 감염병 전문가로 감염병 위험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말

하는 편이다. 그는 4~6주간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완전한 봉쇄 조치를 취하자고 최근 제안한 바 있다. 옳은 입장인데, 바이든은 이에 대해 입장 밝히기를 회피했다.

하지만 오스터홀름은 축산업계를 옹호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의 공장형 축산업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중국에서 처음 ‘무증상 감염 전파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을 때, “17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연구를 해 왔지만 잠복기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험이 많은 바이러스 학자가 돌연변이 가능성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나머지 한 명은 이지키엘 이매뉴얼로 그는 오바마의 전 수석 보좌관 이매뉴얼의 형이고 자문단 내에서도 가장 혐오스런 인물이다. 그는 2019년에 이렇게 소신을 밝힌 바

바이든은 선거 직후 기업주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경제를 원래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일터에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코로나19를 통제해야 합니다.”

바이든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전등 스위치가 아니라 다이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에 따라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세조정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바이든은 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기존 비용이 저렴한 게 결코 아니다. 보험사들은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이든의 계획 하에서도 약값은 제외된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나 ‘쿵푸바이러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베이징 지사를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보듯 감염병을 ‘외부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태도는 이후 감염병 예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뛰어넘은 곳으로 알려진 중국 남부 지역의 농장 중에는 미국 기업인 골드만삭스가 소유한 곳도 많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

있다. ‘70~90세가 되도록 열심히 산 사람들이 늙어서 하는 일’은 대개 노는 것이다. … 그런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앞으로 요양원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들을 코로나19 재난에서 구출할 것 같지는 않다. 바이든은 그보다는 미국 자본주의를 구출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범한 미국인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같은 아래로부터 운동만이 미국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생물학자인 롭 윌러스가 11월 22일 〈트루스아웃〉에 기고한 ‘Biden’s COVID Plan Is Better Than Trump’s, But Still Far From Sufficient’을 많이 참고해 쓴 것임을 밝힙니다.

진화생물학자 롬 윌러스 강연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롬 윌러스(하단 사진)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사회자: 롬 윌러스는 '농생태학·농촌경제연구단(ARERC) 소속이고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또한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 감염병, 농업, 과학의 본질에 관한 보고서》[국역: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서평 링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다루는 새 책 《죽은 역학자들》을 9월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롬 윌러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은 아주 나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감염자가 6200만 명이 넘지만, 이는 각국 당국이 확인한 규모일 뿐 실제 감염자 수는 그 5~10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1400만 명이 감염됐고, 인도에서는 900만 명 이상, 브라질 600만, 프랑스 200만, 러시아 200만, 스페인 160만, 영국에서는 160만 명 이상 감염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략 150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아직 겨울 유행의 겨우 초입입니다. 상황은 아주 나쁩니다.

이런 문제에서 과학이 하는 구실에 대해 잠깐 얘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초 이런 문제에 우리를 빠뜨린 것도 과학입니다. 저 자신도 진화생물학자이고 제 연구 분야에 금지가 있지만, 기후변화나 팬데믹 등 이 난장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데서 과학이 자본주의의 공범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부르주아지가 자연을 상품화하고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처음부터 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학들은 자본주의 생산 사이클 심장부에 조직돼 있고, 신자유주의적 계기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예컨대 제가 있는 미국 미드웨스트 지역 대학들은 처음 생길 때 토지를 불하받으면서 현지 농부들을 도와 농업을 연구



공장형 축산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면역학적 '방화벽'을 걷어낸 것과 다를 없다

하겠다는 약속을 대학 현장에 새겨 넣었지만, 주 정부들은 재정 지원을 중단했고, 대학 당국은 소위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그 현실이란 대학 캠퍼스를 사실상 농축산기업의 연구개발 부서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적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로운 탐구를 포기했습니다. 흔히들 과학이라 하면 호기심을 파고들어 연구하고 새로운 발견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과학자로 일하면서 대학들이 그런 연구를 배격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오늘날 대학 연구는 사실상 기업을 위해 일하면서 오버헤드[수주한 연구비에서 대학 본부가 가져가는 돈을 벌어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각종 연구들이 세우는 비용-효율 산정식은 경제지상주의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는 공공성이 큰 기관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체제의 수탈적 성격이나 인위적 결핍에 대해서는 입을 다웁니다. 그런 것을 파헤치는 분석인 것처럼 제시되지만 말이죠.

야생지역 파괴와 공장형 축산

그럼 이런 게 코로나19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본에서 농업이 이번 위기를 야기한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하의] 농업은 마지막으로 남은 소위 '미개척 농지'를 확보하려고 산림을 밀어버리고 영세 토착 농민들을 몰아냄으로써 사회와 야생과의 접촉면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야생 종이 자취를 감췄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들도 있었는데 박쥐와 거위가 그런 사례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볼라는 [2013년] 서아프리카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하기 전에도 중간 장벽을 넘어 사람을 감염시키고 마을을 덮치곤 했습니다. 치사율이 90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한두 마을이나 고릴라 무리가 큰 타격을 받곤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서아프리카를 강타했는데 당시 3만 5000명이 감염돼서 1만 1000명이 숨졌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시신이 거리에 뒹굴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구조도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고, 역학적, 임상적 내용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을까요?

[주류] 과학은 이런 문제에서 바이러스만 들여다볼 뿐 병원체가 등장하는 더 큰 인과관계는 보지 못합니다. 반면 저희는 이 현상을 '신자유주의 에볼라'라고 부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중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라이베리아는 1925년부터 수탈당했고 고무 채취가 오래전부

터 이루어졌지만, 이런 나라들은 최근 20~30년 전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요구대로 구조조정과 다국적 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그 비용을 부채로 조달하는 대신 공공보건과 동물 방역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와 함께 준국영기업들이 급격히 부상해 산림농업 지역에서 영세 농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파괴하여 단일 품종 경작지로 만들고, 농민들을 그 지역의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일어난 토지 '인클로저'가 서아프리카에서 되풀이된 것입니다.

그러나 곤충을 먹는 박쥐나 과일을 먹는 쥐들은 쉽사리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새로 등장한 플랜테이션 산업, 예컨대 팜유, 마카다미아 농장에 새 터전을 마련합니다.

이 박쥐들은 보금자리와 사냥터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포식자도,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박쥐와 현지인들의 접촉이 잦아졌는데 박쥐는 에볼라 등 다양한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중간 감염이 빈번해지고 중간 감염 병원체가 다양해졌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은 일감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임금을 벌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에볼라는 서아프리카 오지에서 도시로 직행할 수 있었고, 비행기를 한 번만 타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가 [전파 과정의] 한쪽 끝이고요 다른 쪽 끝은 야생

의 오지인데요, 일부 병원체가 야생에서 반대쪽 끝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생산의 순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업적 양돈장과 양계장에서 온갖 병원체가 출현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대도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장형 축산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논리가 첨단을 달리는 곳입니다. 가축들은 사실상 살코기로 된 이윤으로 취급됩니다. 가축에 관한 모든 것 — 유전자 단계부터 사료 선정, 성장, 운반까지 — 이 단기간 안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진화생물학자로서 2005년부터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저는 뉴욕시에서 자랐고 농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고 간접적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 제가 농업을 연구하게 된 것은 공장형 축산에서 가축을 키우는 방식이 수십억 명의 목숨을 빼앗을 병원체를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형 축산에서는 한 축사에, 예컨대 칠면조 1만 5000마리 또는 산란계 25만 마리를 몰아넣고 키웁니다. 이처럼 유전적으로 비슷한 동물들을 한군데 몰아넣으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유전적 방화벽을 없애는 효과를 냅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는 병원체가 다양한 면역 체계들을 뚫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닭이 면역 체계가 똑같으면 병원체는 그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게다가 그토록 많은 닭을 한군데 모아놓으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병원체가 선별되게 됩니다.

공장형 축산이 아닌 상황에서는 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구해야 한다

롭 윌러스: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효능 있는 백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제시된 세 가지 백신(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평생 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면역력을 갖게 되는, 예컨대 홍역 백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는 백신은 ‘살균면역’을 제공하는 백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된 백신들은 다만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면역력을 제공할 뿐입니다. 대체로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백신을 맞으면 다시 술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수다를 떨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정말이지 그러길 바라지만) 오산입니다. 애초 그럴 수 있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백신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 실험을 일부 건너 뛰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죠.

백신을 빠르게 생산하고 조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내] 2000만 명분을 생산한다고 하면 꽤 많아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백신을 맞기까지는 반년에서 1년 반까지 걸릴 것입니다.

제 생각에 백신은 이데올로기적 대용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남한, 대만 등 기이하게도 정치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나라들이 그랬는데, 이런 나라들은 주눅거리면서 “음, 어쩌면 우리가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방향을 약간이나마 진지하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은 마치 휘파람을 불고 태연한 척하면서 공동묘지를 지나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호되게 당했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호되게 당하고 이데올로기적

대용물[백신]로 혼란에 빠질지언정, 자신들이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재로 자기들의 부를 늘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우리가 저들에 되받아쳐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배계급이 제대로 하는 곳은 없다는 질문에 대해] 사실 저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했지만, 저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강요해야만 올바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희망을 갖고 싶지만, 결국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회피하려고 희망을 운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향후 몇 세대의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 서 있고, 근본적 개입이 요구되는 존재론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주아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의 체제가 애초에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자연 파괴와 착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말입니다.

저들은 ‘그린 워싱’[기업들이 친환경 홍보로 자신의 환경 파괴를 은폐하는 짓을 하거나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식의 케인스주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공기, 물, 식량처럼 삶에 필수적이고 원래는 풍부했던] 자원이 부족해질수록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더 커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이를 “로터데일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런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경쟁이 마치 세계를 구원할 방법인 양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영농 원주민들을 땅에서 내쫓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곳을 먹거리숲[다양한 먹거리 식물들이 자연과 비슷한 생태계를 이루도록 조성한 곳]으로 일궈 온 사람들입니다.(우리는 흔히 이런 곳을 자연으로 오해하고는 하죠.) 그런데 소위 ‘기술 경영 기법’을 도입한답시고 이들을 내쫓고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주아지들이 아무리 깔끔하게 차려입고 공손하게 행동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시오패스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이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하지만 멸종을 초래할 정도로 자원을 추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답을 기대하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선의나 좋은 아이디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미련을 갖고 계시다면 얼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에 대해 묻은 분이 있었는데, 저는 중립적 과학이라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과학자로서 엄격한 경험주의 즉,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바람과 혼동하지 않으려는 노력(‘흠의 길로탄’) 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은 그 방향으로만 너무 나아간 나머지 방법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고심하지 않는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돈 많은 사람이 접근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완수할 방법을 찾아주게’ 하고 시키는 대로, 결국 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식량을 생산해야 수억 명의 목숨을 빼앗을 병원체를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다면 지금처럼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연구와 연구비의 많은 부분은 우리를 파괴하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훌륭한 연구들이 많다고 보고 또 제 논문들도 다른 과학자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다만 저는 그 연구들이 당연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이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즉 충분히 엄격하고 통계 분석을 사용하면서도 실증주의적 경험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주의에 기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경험주의는 땅과 자연, 사람이 모두 함께 변하고 역사적 계기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자연]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는 독특한 정치경제학을 이룬다는 관점입니다.

예컨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코로나19를 다 이해한 것처럼 구는 대신에, 중국에서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 박쥐의 서식지들에 점차 침범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코로나19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체가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다음 숙주를 마련하기 전에 숙주가 죽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야생의 숲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물들이 있어 치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기도 어렵고, 또 어쩌다 치명적인 병원체가 등장하더라도 연쇄적으로 숙주를 확보하는 데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숲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닭이나 돼지 등이 한 곳에, 그것도 아주 높은 밀도로 모여 있으면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숙주가 언제나 준비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체가 농장 전체를 빨리 감염시킬지 사실상 경쟁을 붙여 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농업에서 최악의 병원체가 양성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축들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감염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죽지 않고 생존한 가축이 한두 마리 있기 마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이 휩쓸고 지나간 곳의 사진을 봐도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새들이 있곤 합니다. 이런 동물들에게는 감염에 어느 정도 저항하는 유전적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새들의 후손을 키우면 해당 병원체에 면역력이 있는 새들을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형 축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배는 가축이 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큰 젖통이나 빠른 성장 속도 같은 형태적 특징을 겨냥한 원종(原種) 수준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자본주의 농업은 자신을 방어할 자체적 수단이 없습니다. 백신에 의지하고 항생제에 의지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항생제 내성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매일같이 백신 뉴스를 접하실 테지만 사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도 백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저항력을 만들어 내려면 해마다 수십억 마리의 새에게 백신을 놔야 합니다. 백신 개발에는 장시간의 수고가 들어가기에 어떤 감염들은 아예 잡지도 못합니다. 예컨대, 이곳 미국 중서부에서 H5N2 조류독감이 닥쳤을 때 1년 뒤 백신이 개발됐지만 이미 바일러스는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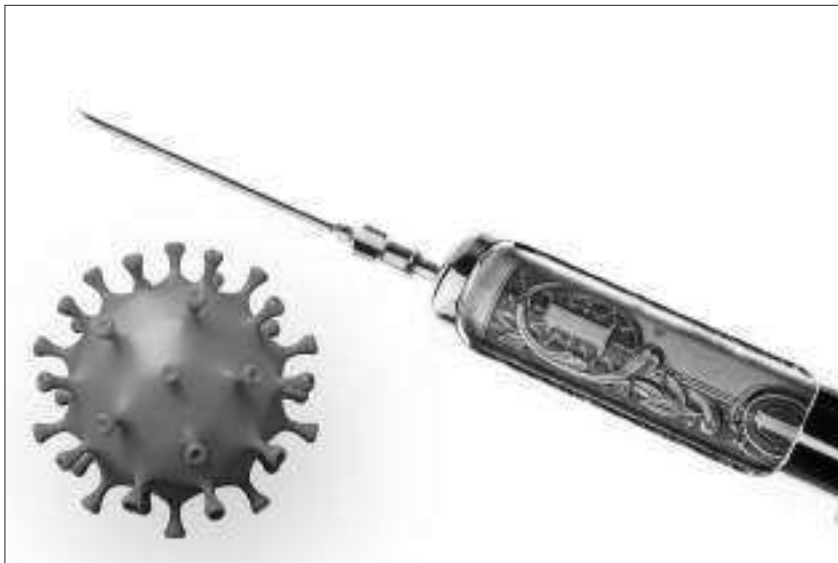
제가 백신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백신은 감염병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이지만 사후적 대응이라는 것이고, 애초 감염병이 생기기 전에 막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발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라비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까요? 가난한 나라나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언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지배계급은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을까요?”

라비아는 “과학이 중립적으로 연구되는 곳은 없나요?” 하고도 물었습니다.

이건 자일스의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야생동물에서 사람에게 옮겨 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백신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

코로나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지난 11개월을 거치면서 주류 과학계는 ‘이제는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류 과학계의 입장은 야생 박쥐를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전파됐다는 것인데(야생 기원설) 저도 가설로서는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내 다른 관점이 더 우세해졌습니다.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사스2[코로나19]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간 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전염됐고 다만 우한에서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하도록 변이했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연구를 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사람에 감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02년에 사스1이 처음 터졌을 때 수집된 중국 남부와 중부의 박쥐 샘플들은 온갖 종류의 균주가 그곳에 돌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온갖 균주가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퍼졌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후 20년 동안 3번의 사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스1, 메르스, 사스2[코로나19]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사스2는 유행할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었고 어쩌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부터 전파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21, 코로나22가 오고 있을 가능성도 큼니다. 왜냐하면 중간 장벽을 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서 그런 내용은 간과됐을까요?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후 시대에 경제를 자유화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건너가 노동자가 된 동시에, 농촌 지역들이 농민 농업에서 산업적 농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 의미의 산업적 농업이 들어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생 식량 시장(사향고양이, 박쥐 등)도 산업화했습니다.

이 두 부문에 돈을 낸 것은 근본에서 같은 세력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시장을 규제하고 산업적 농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데 둘 다 생태계에 가하는 충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중국 중부와 남부의 야생지역을 침범하고 있고,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유행이 야기된 것과 비슷하게 박쥐와의 접촉면을 넓혀서 중간 감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라 불리는 사스2 바이러스는 인간의 면역계와 오랫동안 씨름해 온 숲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하나로 다만 인간 면역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기원설 말고 좀더 섬뜩한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실험실에서 코로나19가 생겼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불행히도 트럼프가 자신의 실수를 덮고 중국을 비난하려고 내세우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실험실 기원설 중에는 얼토당토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2019 우한 세계 군인체육대회에서 [CIA에 의해] 퍼졌다거나,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고의로 유출됐다는 얘기 등은 유전자 분석을 해 보면 사실이 아님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이 보여 주는 바가 있습니다. [2001년] 9·11 공격 이후, 그리고 21세기 들어 유명세를 탄 첫 바이러스인 H5N1 유형 [2003~2004년] 이후 생물안전 3~4등급 실험실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실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물질을 다룹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실험실이 언제나 최상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험실 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다 해도 실험실이 늘어나면 가능성은 필연성으로 전환되기 마련입니다.

2013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진은 실험실 신설 현황을 발표했고, 또 주류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실험실들의 위험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마크 립시츠, 예일대학교의 앨리스 갈바니 등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중간 장벽을 넘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커졌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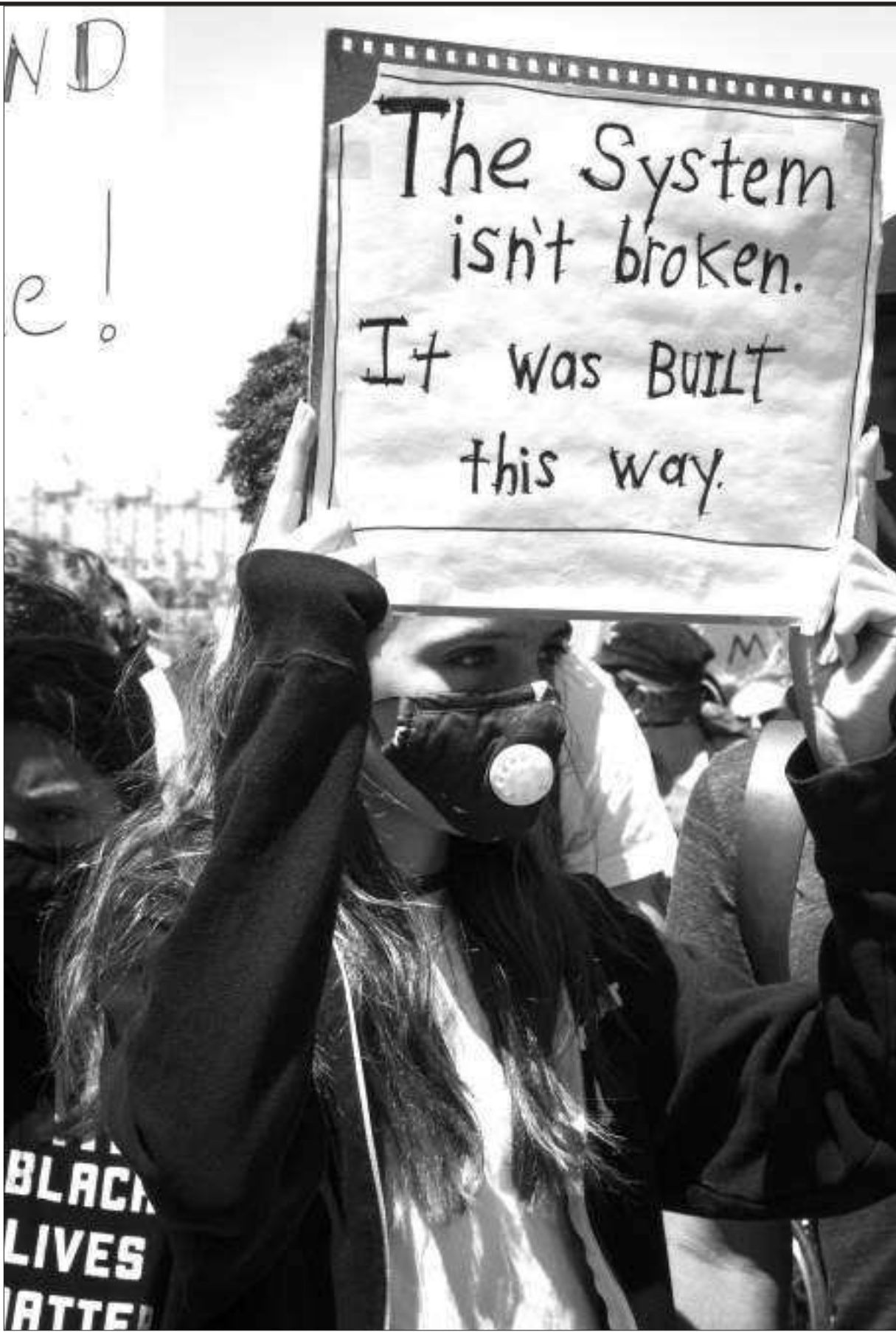
저는 여전히 야생 기원설을 더 지지합니다만 조너선 레이섬이 제기하는 실험실 기원설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너선의 가설은 [박쥐를 숙주로 삼던] 사스2가 중국 윈난성의 광산에서 박쥐 배설물[을 치우던] 광원 6명을 감염시켰고, 그 샘플이 우한의 실험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레이섬은 그 광원 6명에 대한 임상 보고서를 제시합니다.

저는 3월에 코로나에 감염됐었는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직감적으로 2012년 윈난성 그 동굴에서 뭘가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설이 다 옳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계와 많은 나라의 정부들에게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를 덮을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났고 부상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만 신경 쓰자면서 주의를 돌릴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구조적인 것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고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생 기원설이든 실험실 기원설이든 똑같은 문제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농축산업의 실태, 야생 지역을 침범하는 문제, 공장형 생산,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균주를 사실상 선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자본주의 논리와 단절한 농축산업

사회자: 마지막으로 고든의 질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롭 월러스: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방지할 대책은 분명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인 동시에 아주 거대한 담론이기도 합니다.

실천적으로는 농축산업을 다시 자연 방식, 공장형 생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동식물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동물을 산업화하면 그들 사이에서 도는 병원체도 산업화하는 셈이 되고 병원체의 독성을 키우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농축산업을 운영한다면 병원체들의 확산을 막을 면역학적 방화벽이 생기게 됩니다. 또 동물들을 기르는 현장에서 번식할 수 있게 한다면 전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축사에서 실제로 필요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태계의 자연선택을 재확립해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신진대사 균

열을 치유하는 것은 생태적 과제인 동시에 정치적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도시와 농촌 사람들이 서로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의 건강, 안녕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농부들에게 다시금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단일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무엇을 기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농가뿐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농축산업이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해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현재의 농축산업이 낳는 피해를 농축산업 기업들의 회계장부에 포함시킨다면 어느 기업 하나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효율을 정치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제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단지 농축산업 행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도시와 농촌 사람들의 건강, 안녕 문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

지 이해하는 국가가 농부들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는 그저 주식시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끔찍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가 낳는 위험을 깨닫고 변화를 관철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전 세계의 노동하는 사람들(단지 공장이나 캠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농민들, 전 세계의 원주민 등)이 서로의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병원체가 이번처럼 부상하는 것을 막을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제대로 개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공급할 현실적인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람을 단지 노동력으로, 자연을 단지 생산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허황된 세계가 아니라 실제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출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유튜브 채널
녹취 한가는 번역 김중환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이현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살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는 지난해 6468건에서 1만 7012건으로 약 3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줄어든 소득, 고립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지표들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음을 보여 준다.

실업과 가난, 차별

한국의 자살률은 2005년 이래로 줄곧 OECD 1위를 차지해 왔다. 자살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업이나 가난 등 경제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칠 때마다 크게 치솟았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특히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것도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 자살자 중 70퍼센트가 남성이다. 남성은 가족 부양자라는 기대에 맞추지 못할 때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고민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압력도 남성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원인의 하나라고 의사들은 지적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청년(특히 젊은 여성)의 자살·자해·자살 시도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런 추세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전에 시작됐다. 20대 청년의 자살률은 다른 세대보다 높지는 않지만 3년 연속 소폭 오름세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자살자 수는 여전히 20대 남성이 더 많지만 여성 자살률의 증가 폭이 커서 그 차이가 줄고 있는 게 특징이다.

긴 시기를 두고 보면, 20대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은 같이 상승하고 하락해 온 추세다(그래프 1). 자본주의가 노동자·서민층의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성적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노동자·서민층 청년들의 삶이 밑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 태어난 현재 20대는 경제 위기 시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며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세대이지만 여전히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공식 청년 실업률은 8.9퍼센트로 IMF 외환 위기 시기인 1990년대 말 이래 최고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은 무려 25.4퍼센트로 청년 4명 중 한 명이 실업자다(올해 9월).

최근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여성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며 전의 어느 때보다 많이 대학에 진학하고 노동자가 된다. 이를 배경으로 여성들의 자의식과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사회와 직장에 진출한 여성들은 이내 여전한 여성차별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 젊은 여성들은 구직 시장과 직장에서 체계적으로 차별받을 뿐 아니라, 흔히 외모로 평가받으며 천대받고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젊은 여성들에게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처지를 비판한 노인에서부터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 취직 장벽에 좌절한 청년들까지 이들이 처한 구체적인 조건과 비판의 계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들 모두 **인간의 기본적 필요(육체적·정서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이윤 축적을 우선시키는 자본주의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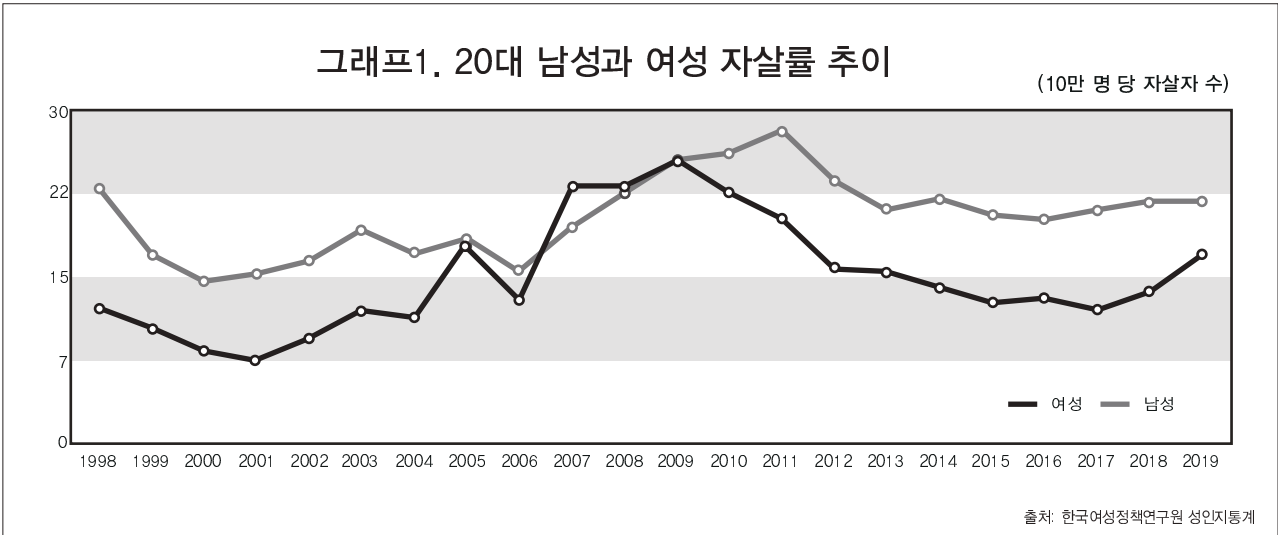
문제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더한층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노동계급과 서민들이 삶의 조건이 더 나빠지며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실업자 수(102만 8000명)와 실업률(3.7퍼센트)은 모두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말 이후 최고 기록이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49.7퍼센트에 달했다(5월 기준).
-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든가 굶든가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 일부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강도로 고통받고 있다. 올해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고, 그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방역 노동자들은 심각한 ‘번아웃’(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
- 물리적 거리두기가 수개월간 지속되며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 독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같은 거리두기 하에서도 널찍한 집이나 교외 별장에서 지낼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과 좁은 방에서 어린 자녀들과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노동계급·서민층 가정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완전히 다르다.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

코로나는 기존 사회에서 더 취약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가령,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뒤 노동자들은 심각한 실업난에 고통받



20대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은 같이 상승하고 하락해 온 추세다. 자본주의가 노동자·서민층의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그래프 2, 3). 여성과 20~30대 청년들의 종사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취업은커녕 채용 일정이 연기·취소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할 기회도 얻기 어려워졌다. 월세나 관리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일도 더 많아졌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은 지난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6.8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18년 이뤄진 유사한 조사(2.7퍼센트)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다(《경향신문》 12월 7일자). 한편, 코로나로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가사와 양육 부담은 더욱 늘었다. 대구여성이 족제단이 7월 중순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성들의 자녀·노부모 평균 돌봄 시간은 이전보다 무려 6시간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소외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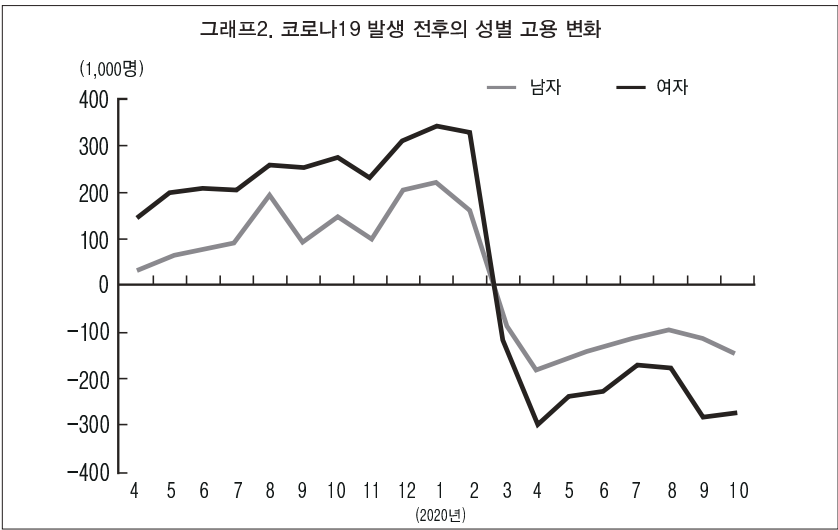
이렇듯 청년과 여성 사이에서 우울감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다.

복지 대폭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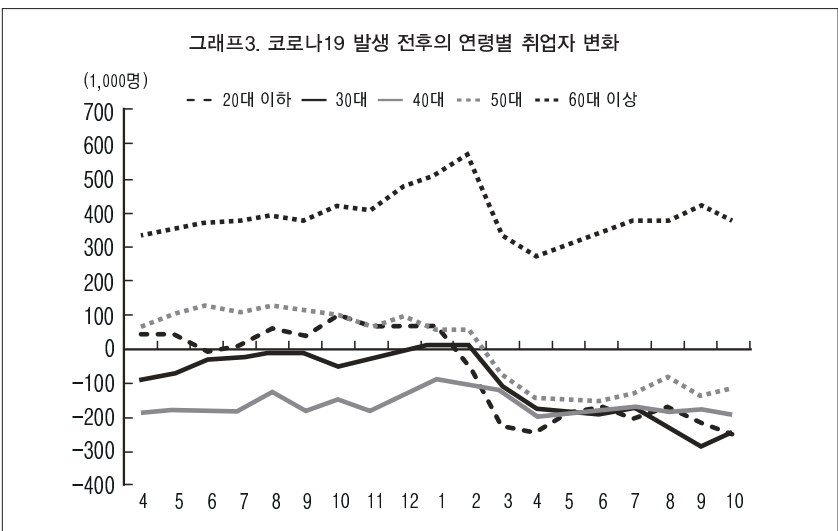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월 30일 정부가 2030여성고 학생(청소년)의 자살 증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은 완전히 알맹이가 빠져 있다. 직업 훈련, 자살 예방 상담 강화 등 별 실효성이 없거나 역부족인 것들이다. 그런데다 민주당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고용, 복지, 교육, 보육, 방역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한 2021년 예산안을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켰다.

자살과 우울, 불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양



서비스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여성들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20~3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었다

질의 일자리 창출, 제대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국민에 대한 충분한 재난 지원금 지급, 양육 등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계급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대폭 확충돼야 하고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담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 지원과 국방비에 쏟아 부은 재원을 대중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살과 정신적 고통은 자본주의 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윤 축적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희생시키고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어렵게 만든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자들

임에도,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을 모두 박탈해 날마다 무력감에 빠지게 만든다.

팬데믹과 그 충격으로 심화된 경제 불황도 인류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 그것이 낳은 파괴적인 영향 모두 자본주의가 낳고 악화시켰다. 자본주의를 인간의 필요 충족을 우선시키는 사회주의 체제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노동계급 대중이 스스로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체제에 맞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일상을 지배했던 무력감을 떨쳐 버리고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1848년 프랑스의 혁명이 전 유럽을 뒤흔들었을 때 유럽 전체의 자살률이 격감한 바 있다.

팬데믹 하의 국제 정치상황

김준호

이 글은 필자가 노동자연대 회원 토론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위기가 세계적 규모에서 놀라운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는 결코 안정돼 있지 않았다. 만성적 경제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비상사태, 극우·파시즘의 준동, 대중항쟁의 분출 등.

경제가 다시 추락하리라는 전망이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었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충격 이래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브라질·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제조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자본주의의 산물이 위기 심화의 촉매로

코로나19는 발생·전파·효과 면 모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적 면모를 뚜렷이 드러냈고[진화생물학자 루스 윌리스의 관련 인터뷰 보기], 이 체제가 위기를 관리·해결할 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미 약 7400만 명이 전염됐고, 160만 명 넘게 사망했다.

게다가 전염병이 세계 자본주의의 생산·유통망을 따라 계속 번져 나가면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침체로 접어들었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생산량과 교역량 모두가 뚜렷이 하락했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강경 우파가 집권한 미국·영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지에서 특히 컸지만, 중동 좌·우파가 집권한 이탈리아·벨기에·프랑스·스페인 등도 만만치 않았다. 일례로,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회당과 포데

지정학적 불안정도 심각했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긴장이 첨예해지고 있었다. 2020년 벽두에 미국이 이란의 실세 군 장성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도·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경 우익이 집권해 인종차별과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와중에,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극우와 파시스트가 준동하고 있었다. 반면, 프랑스·칠레·홍콩·레바논·이라크·수단 등지에서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 이런 항쟁들은, 그 전 10여 년간 지배자들이 은행과 기업은 구제하지만 노동계급을 비롯한 서민 대중을 공격한 것에 대한 분노가 배경을 이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때쯤, 이런 격동의 물결이 잠시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한층 날카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스가 연정을 구성한 스페인이었다.

각국 정부들은 대개 이윤을 하락을 우려해 뒤늦게, 또 턱없이 부족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그 정도 전염병 대응만으로도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염병이 한창인데도 무리하게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 들었다. 확진자·사망자가 치솟았다.

자본주의가 체제의 논리에 따라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색인종과 노동계급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나라 경제도 망가졌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나라들에서 말이다.

방역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여겨진 나라들(대표적으로 중국)은 경기 둔화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듯하지만, 피해를 온전히 면치는 못했다. 예컨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4년 만에 최저치다. 중국의 평균 임금 인상분도 코로나19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크게 줄었다. 대도시에서 노동자



공포와 희망이 교차한 2020년 자본주의 체제가 재앙을 낳았지만 그에 맞선 저항도 분출했다

들이 집세를 내지 못해 퇴거당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방역 실패가 겹친 많은 나라들에서 정부 지지가 하락했다. 특히 강경 우파가 집권했던 미국·브라질 등지에서 그랬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하지만 방역을 비교적 잘 했다고 여겨진 나라들이라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국 지배자들은 “국민적 단결로 국난 극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외부인’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며 인종차별·국수주의를 부추겼고, 방역을 명분으로 경찰력·검열 강화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통해 대중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

게 차단하려 했다.

한편,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국가 간 갈등도 더 첨예해졌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가 세계적이지만 위기 해결 과정에서 ‘국제 공조’가 발휘되기는커녕 국가들이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위기의 타격도 불균등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중 갈등의 골이 더한층 깊어졌다. 시진핑은 코로나19를 비교적 빨리 ‘극복’했음을 내세워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려 들었고, 트럼프는 초기 방역에 처참히 실패한 것을 덮으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줄기차게 떠들었다.

핵 강국들인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도 격화했다. 동지중해와 중동에서도 역내 갈등 수위가 높아졌는

데, 지역 강국들뿐 아니라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들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기존의 갈등이 전쟁으로 격화했고, 여기에도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원하는 여러 국가들이 개입했다.

기후 재앙도 빈번해졌다. 지난해 시작된 호주 산불은 올해 2~3월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몇 달 후에는 미국 서부 12개 주(州)에서 몇 달 동안 산과 들이 불탔다. 대서양발 태풍도 역사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빈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사회적 비용 지출은 위기의 크기에 견줘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약속된 대응들도 경제적·지정학적 경쟁 때문에 뒤처리곤 했다.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위기가 중첩되고 지배자들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체제의 ‘정상적’ 지배 방식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된다. 체제가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대중의 생명, 안전, 복리 증진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염병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과 생계)과 안전(방역)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배자들은 전염병 대응에 대개 무능하고, 위기

의 대가를 대중의 생명과 안전으로 치르려 한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업, 가난, 복지 삭감 등에 더해 전염병마저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가 양산한 엄청난 불평등, 자본 논리에 자연을 욕여넣으려 하고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 불치병처럼 거듭되는 경제 위기, 체제에 깊이 뿌리 내린 인종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점차 깊어졌다. 그리고 이런 불만들은 때로 급작스런 투쟁으로 분출하기도 했다.

때로 코로나19 자체가 투쟁을 낳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해 정부의 방역 방기에 항의했고, 영국·스페인·미국 등에서는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역 완화에 반대하고 작업장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투쟁을 벌였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것이다. 이 운동은 유색인종과 노동계급이 경제·전염병 위기로부터 커다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분노와 그 과정에서 더한층 부추겨진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만나 폭발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벌어진 모든 항쟁 중 가장 규모가 컸는데, 미국뿐 아니라 80여개 국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그중 몇몇 나라들에서는 운동이 ‘현지화’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독일에서 극우와 무슬림 천대에 반대하는 운동이 성장한 것이 그 사례다.

기존 정치 체제의 오랜 병폐들이 반

란을 촉발한 경우들도 있다. 타이에서는 부패한 왕정과 군사 정권에 맞선 청년 항쟁이 분출했다. 벨라루스에서는 독재자 루카셴코의 선거 부정과 경찰 탄압을 규탄하며 대중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이전의 투쟁이 새 국면을 맞은 곳도 있었다. 볼리비아에서는 2019년 우익 쿠데타에 반대해 총파업과 대규모 도로 봉쇄가 벌어졌다. 폴란드에서는 대중 투쟁으로 막아냈던 낙태 금지 확대가 다시 추진되자, 그에 맞

▶ 11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Anthony Quintano(틀리거)



사진 출처 Brady Hesson



사진 출처 Backbone Campaign(틀리거)

불황과 코로나19는 사람들을 가난과 고통으로 내몰았고(위), 미국 서부의 대형 화재(가운데)에서 보듯 기후 재앙은 빈번한 일이 됐다. 하지만 저항도 있었다. ‘인종차별은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 나선 시애틀의 보건 노동자들(맨 아래)

▶ 10면에서 이어짐

서 격렬한 대중 시위가 분출했다. 그리스에서는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범죄 집단으로 규정되면서 반(反)파시즘 운동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수단에서는 시위가 다시금 격화하며 지난해 군부와의 합의로 혁명이 억제됐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런 운동들은 2019년 세계적 반란 물결의 몇몇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노동계급 대중이 대규모로 저항에 나섰다. 둘째, 이들은 위기가 중첩되면서 겪은 공통의 피해(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함)에 대한 분노를 공유했다. 셋째, 그래서 기존 집권 세력과 그들의 지배 방식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넷째, 이들 운동은 대개 급작스럽게 분출했고 놀랄 만큼 전투적이었다.

지배자들이 강력하게 탄압했지만, 적잖은 경우 저항은 탄압에도 아랑곳 않고 더 격렬해졌다. 일례로, 트럼프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초기부터 군대 투입을 위협했고 경찰과 연방 부대로 시위를 계속 공격했지만, 운동은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불만이 저항으로 분출한 것은 아니었다. 그 양상은 나라별로 상당히 불균등하다.

각각의 나라에는 저마다 독특한 구석이 있다. 사회적 불만이 깊어진다고 자동으로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의 파괴력과, 그 와중에 노동계급이 겪는 경험과 느끼는 자신감도 나라마다 똑같지는 않았다. 때로 인종차별·국수주의를 부추겨 노동 대중의 쓰라림과 분노를 뒤틀려는 오른쪽으로부터의 시도가 먹히는 경우도 있었다.

나라 안팎에서 긴장이 강화되는 와중에 지배자들이 ‘애국심’에 호소(“국민적 단결로 국난 극복”)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저항의 발전에 만만찮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오른쪽에서는 ...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문제는 여러 집권 세력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방역을 방기하고 대중의 고통에 냉혹했던 강경 우익 집권 세력들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

코로나19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패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지표상 나아지는 듯했던 경제 상황에 기대 재선을 도모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가 미국을 강타하고 경제를 ‘역대급’으로 둔화시키면서 그 전략은 산산조각났다. 재앙적 전염병이 고삐 풀린 듯 날뛰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인종차별·국수주의에 더한층 기댔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도 최근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11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대승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와 브렉시트 문제 등으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인도의 힌두 국수주의자 나렌드라 모디는 역대 규모의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반란에 직면했다.

하지만 강경 우익·국우 세력이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곳에 따라 국우 세력과 파시스트들은 전염병 위기 속에서 전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

기도 했다.

기성 권력자들이 전염병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기도 심화하면서, 여러 음모론이 번성했다. 위기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하층민들에게 진보적 변화가 현실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에 더욱 그랬다. 미국에서 큐어넌(QAnon) 음모론이 운동으로까지 성장하고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반(反)마스크 무장 시위가 분출한 것, 영국과 독일에서 “전염병은 조작”이라는 음모론이 대규모 ‘반(反)마스크’ 시위를 연거푸 촉발한 것 등이 그 사례다.

음모론에 담겨 있는 여러 반동적 요소들은 국우 정치와 손쉽게 연결될 수도 있었다.

지배자들이 인종차별·국수주의 등을 고무한 것도 국우에게 기회가 됐다. 트럼프가 재선 승리를 위해 국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를 고무한 일이 그랬다. 그 덕에 오랫동안 파편화돼 있던 미국의 국우·파시스트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성장할 전망과 자신감을 얻었다.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과 그 대표 마린 르펜이 기세를 올리는 데서도 비슷한 동향이 작동했다.

요컨대, 위기가 심화하는데 기존의

지배 수단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국우·파시스트들은 체제가 뿌리는 온갖 반동적 사상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며 기반을 지키거나 다질 수 있었다.

이런 힘이 기성 정치의 우경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정치 지형 전체를 노동계급에 해롭게 바꿀 수 있다는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저지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반(反)파시즘 운동의 승리가 그 좋은 사례다. 그리스에서 혁명적 좌파가 중심이 돼 황금새벽당이 급성장하기 전인 2009년부터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라는 광범한 연대체를 결성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실천이었다.

이 운동이 강력하고 광범한 운동으로 발전하고, 황금새벽당의 총선 패배에 만족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간 덕에(여기서 혁명적 좌파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 황금새벽당에 중요한 패배를 안길 수 있었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무엇이 필요한가?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고 있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되고 사지로 내몰리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대중의 울분은 더 커질 것이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1942~2009)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공격 때문에 “계급적 울분이 곳곳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다”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제 그 웅덩이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정치 전략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부상했던 좌파적 개혁주의는 대중의 진보적 변화 염원에 대개 부응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의 선거 도전이 또다시 좌절하고(샌더스는 좌파 개혁주의자가 아니고 그 자신의 정치 지향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였다. 다만 부르주아 양당 체제가 공고한 미국의 정치 맥락에서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영국에서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 좌파가 가라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지난 몇 년간 스페인에서 부상했던 포데

모스는 올해 사회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체제를 이용해 노동계급의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개혁주의 전략 때문에 위기에서 체제를 구출하려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에 따르면, 대중의 사회적 불만이 투쟁으로 거대하게 분출할 때 그에 제대로 교감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은 올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거의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샌더스 자신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경찰 해체 요구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오히려 경찰 예산 증액을 지지했다.

이런 태도로는 진보적 변화 염원을 억제하고 위기에서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구제하려는 지배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나”

오늘날 세계는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와 작동 방식 자체가 이 위기를 낳고 키우고 있음을, 그리고 이 체제

의 지배자들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도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폴란드와 독일에서 활동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가 주장했듯이, 이 사회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나” 하는 갈림길에 있다.

불평등·차별·재앙에 맞서 올해 분출한 반란들은 진정한 변화의 희망을 흘깃 보여 줬다. 미국에서 그간 비현실적이라 여겨졌던 (가령 ‘경찰 해체’) 요구들을 당면한 정치의제로 부상하게끔 한 것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라는 (사회적 구성에서 노동계급 비중이 큰) 대중 저항이었다.

체제의 정신 나간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계급투쟁을 중심에 두고, 그런 투쟁으로 온갖 위기에 맞서도록 하는 혁명적 정치 전략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 정치 전략은, 오늘날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위기의 대가를 대중에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시도에 결연히 반대하며, 깊이 고인 계급적 울분이 분노에 찬 투쟁으로 표출되는 것을 고무하고, 승리의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 대안을 굳건히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다.

한겨울 노숙 농성하는 산재 유가족 보다 기업주 걱정인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양효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처벌 하한선 도입하지 않아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이 국민청원 10만 명을 넘겨 발의됐다.

하지만 12월 9일 본회의에서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노조법 개악은 통과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이에 임시국회 종료 전(2021년 1월 8일)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재 피해 유족들과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 중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여름부터 본격화된 지지율 하락 위기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역풍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몇몇 법을 개혁 입법이라며 통과시켰지만, 대중이 이제는 잘 속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야 12월 17일 의원 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 법을 요구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180석 집권당이 저러는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연간 노동자 약 2400명이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1월 19일 인천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11월 24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경기도 화성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하지만 기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처벌 자체가 드물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이 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메아리를 친다.

사용자 책임성(처벌)을 강화한 것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는 것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산재 예방에 앞으로도 돈과 정성을 쏟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윤에 타격을 가해 입법을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처벌 강화

9월에 국민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한 민주노총은 기존 산안법에 비해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시했다. 법인도 형사처벌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도입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원청과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포함했다.

또한, '인과 관계 추정' 조항을 도입해 해당 사고 이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기업 측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산재가 반복되면, 기업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 투자를 회피한 탓이 크므로 사실 산재는 낫던 곳에서 반복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발률은 97퍼센트에 이른다. 이런 경우, 기업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매우 필요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지율이 30퍼센트까지 추락하자 노동계의 지지를 붙잡아 두기 위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처럼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을 위해 법안 처리를 못한 것임이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다수는 기존 산안법을 약간 손보는 수준으로 대응하려 했다. 그래서 지난 여름 한익스프레스 참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했을 때에도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정작 민주당 당론으로는 여지껏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11월 16일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형사 처벌 하한선도 없고, 개인과 법인 벌금은 쥐꼬리만큼 올린 수준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

그 뒤로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들도 처벌 범위와 양형을 높이자고 한다. 하지만 정작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개선을 전제로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약 77퍼센트의 산재가 50인 미만 영세 작업장에서 벌어졌다. 2019년 산재 사망자 855명 중 66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고용노동부 2019년 산재 통계).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건 수많은 산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급이나 위수탁을 맡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그 하청 사업주에게 안전의무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면

처벌 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의도가 뻔하다. 원청이 빠져나갈 틈을 미리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12월 14일 발의돼 사실상 민주당 법안이라 볼 수 있는 박범계 의원안은 이보다도 더 후퇴했다. 초점은 사용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인과 관계 추정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박범계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기승전-검찰 개혁이던 민주당이 역겹게도 산재 문제에서는 검사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업주가 처벌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고 말이다.

검찰은 산재 처벌에 극히 미온적이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재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정식기소한 비율이 일반사건의 절반에 못 미친다.

공무원 처벌 내용도 후퇴했다.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의 종류와 범위도 시행령으로 또다시 축소시키려 한다.

이처럼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유예, 사고 은폐 기업에 대한 처벌을 실질화할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대폭 후퇴시킨 안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믿지 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더더욱 믿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정의당 안과 달리,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점검 등으로 그 의무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책임도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뤄질 때 상당한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와 압박적 근무 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고 이한빛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단식 6일째)의 말처럼 "법 조항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노총도 법안 후퇴 없이 온전하게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나 강은미 의원이 사용자 책임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일부 양보를 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뿐 아니라 상임위 통과까지만 처리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은 내용에서든, 추진 의지든 무엇 하나 진지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지를 추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를 붙잡을 필요도 있지만, 핵심적 지지 기반이 기업주들에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당이 민주당, 심지어 국민의 힘의 협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후퇴 압박만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 알렉스 캘리니코프 논평
하드 브렉시트를 낳은
정치적 선택들